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3-33호 | 2023년 12월 22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정태호 | idp.theminjoo.kr

전세사기특별법 첫번째 개정, 피해자 지원확대가 우선이다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주거불안,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되었다 -

박동욱 연구위원(도시사회공학 박사)

《요약》

■ 전세사기특별법 이후에도 피해자 고통은 여전히 지속

-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2명의 추가 사망자 발생 등 정부 대책의 한계가 보이며, 6개월마다 보완조치를 명시한 특별법의 첫 번째 개정 시기가 올해 12월 도래
-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또다시 상승
-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전환도 아직 0건, 지난6월 특별법 통과 이후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현 정부는 계속 방치

■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 아닌 사회적 재난, 다수 피해자가 청년세대로 더욱 엄중

- 대부분 전세사기가 복잡하고 다양한 공모형태로 개인능력으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수
- 피해자 다수가 40대 이하 청년세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소중한 종잣돈 갈취라는 측면에서 더욱 엄중한 사태로 대응할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 선구제·후구상 방안 등 가장 시급한 5대 과제 등 요구사항 제시

■ 전세사기특별법 올해 개정 시 피해지원 대폭강화, 차후 예방목적 제도개선 필수

- (피해지원) 올해 개정 시, 선구제·후구상 제도 마련과 최우선 변제금 현실화 등 지원강화
- (가해방지) 차후 전세사기범과 악성임대인 벌칙 강화 및 사기공모일당 단속 확대
- (예방·예비) 근본적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플랫폼 등 공인중개사 신뢰성 제고, 임대인정보 제공 확대, 주택의 공공적인 예비 기능이 확대된 토지주택은행 설립 도모

▶ 키워드: 전세사기, 주거불안, 특별법 개정, 사회적 재난, 선구제·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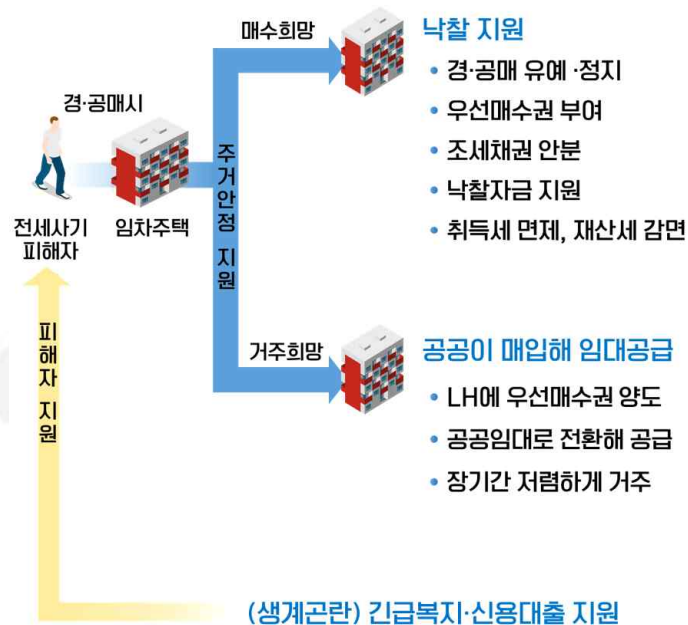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시급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하지만 한계가 보이는 현 정부의 대응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보완조치 명시

- 2022년 12월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자 수백 명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인천, 전남, 대구, 부산, 대전, 경기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2023년 2월부터 특별법제정 이전까지 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
- 정부는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정책을 내었지만,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2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 23년6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시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법안 통과에 동의하였지만 6개월마다 보완조치를 조건으로 명시하였으며, 올 12월이 첫 번째 개정시기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보완이 절실한 상황
- 현 특별법의 주요 지원책은 <그림 1>과 같이 2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①(매수희망시) 우선매수권 부여 ②(거주희망시) 피해주택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 * 12월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대체 공공임대) 구축방안 추진내용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기존 LH매입임대 사례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최근 언론에서 거세지자 등장한 급조된 대책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음

<그림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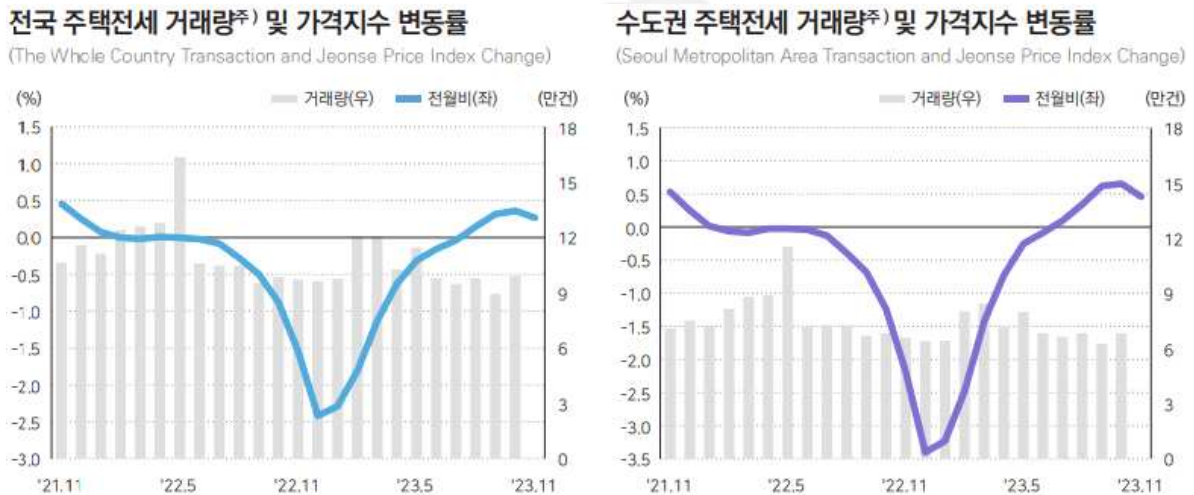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2023.4.27.)

○ 현재 전세가격 상승, 미래 전세사기 위험도 상승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그림 2>와 같이 16주 연속 상승(11월 2주차기준)이며, 수도권에 한정하면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음
- 특히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6주 연속 상승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커지고 전세 매물은 연초보다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 상승세 지속 예상
- 현 추세(전세가 상승-주택가 하락)가 유지 시 두 가격의 갭이 줄어, 향후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을 제외한 전세사기 위험 상승으로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음

<그림 2> 전국(左) 및 수도권(右) 주택전세 거래량 및 가격지수 변동률



(출처: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23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 2023.12.15.)

○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

- 23년12월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지원을 신설하여 수요자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체계구축을 하였다고 홍보하며, <그림3>과 같이 약 1만 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여 경·공매 유예 및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천 건의 지원이 있었다고 보도

<그림 3> 피해자 접수 및 결정 추이(누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피해자 약 9천명 결정 및 3천8백건 지원」, 2023.12.5.)

- 하지만 특별법이 6월1일 시행된 이후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전환은 아직 0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현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2.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 및 피해특성, 피해자 요청사항

○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참사’

- 현재까지 약 1만 명 피해자와 약 4조원 피해금액이 발생
 - * 국토교통부는 9,786건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12월15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사고액은 3.97조원으로 12월 4조원 초과 확실(현 회수율 20%미만, 11월 기준)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사기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이 7가지로 구분 가능¹⁾
 - * 한 예로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유형①)는 시세정보가 불명확한 신축빌라 대상의 ‘화곡동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유형으로 <그림 4>와 같이 피해가 발생, 대부분 전세사기가 복잡한 공모형태로 개인 입장에서 피하기 어려움

<그림 4>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유형 설명



- (유형 ①: 무자본·갭투자) 조직적으로 다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여 리베이트로 분배하는 경우
- (유형 ②: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담보 설정이나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미반환
- (유형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전세 계약 주택에 대해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 진행 등 우선 순위 권리를 숨기고 계약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 (유형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실소유자가 아니거나 부동산에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 이를 속여 보증금 편취하는 경우
- (유형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권리자에게 일부 계약이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유형 ⑥: 허위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대출금을 빼돌리는 방식
- (유형 ⑦: 불법 중개·매개 행위)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계약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1) 출처: 윤성진 외,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3.10.12.
올해 2월 경찰청장은 전세사기특별단속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 대출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한 바 있음.

- 현재까지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만 적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 가능성이 잠재된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또는 참사)’이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수적임

○ 각 지역과 기관이 조사한 전세사기 피해 특성, 사회초년생 등 청년세대가 대다수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시작으로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2명의 피해자가 더 사망하고 더 많은 정책 사각지대의 피해가 알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실태와 사회경제적 삶에 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도시연구소 등 기관별 조사 및 서울시강서구청·경기도청·수원시청 등 지역별 조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강서구 전세사기피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은 ‘40대이하 청년세대, 3억 미만 금액’이며 지금까지 대다수 연구결과와 공통적인 사안으로,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세대의 소중한 종잣돈 갈취라는 측면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함
-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와 새사연은 2023년7월25일까지 971건을 접수
- * p7 <참고1>에서 보듯이, 피해자들은 여전히 우울증·불안장애·공황장애·무기력증 등 심신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40%이상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

- 서울시 강서구 전세사기피해 주요내용 -

(연령) 20대 17%(167건), 30대 41%(397건), 40대 23%(219건)로, 청년세대 대다수
 (주택유형) 다세대32%(307건), 아파트30%(289건), 오피스텔20%(194건), 다가구15% (145건),
 근린생활시설2%(18건) 순, 마지막 두 개 유형은 특별법 적용 난항
 (피해규모) 1억대46%(448건), 1억이하32%(313건), 2억대16%(153건), 즉 3억미만 94%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식 요구내용

- 전세사기·강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강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2월7일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실효성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지원 대책을 고발했지만,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대안 없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
- 가장 시급한 5가지 과제는 ①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②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③다가구주택,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등 사각지대 피해주택 매입 ④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명도 중지 ⑤방치된 피해주택의 단전, 단수 등 시설관리 문제 해결이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
- * ‘선구제 후회수’ 수용 불가 시, 아래와 같은 대안도 제시
 - ①최소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②다가구·신탁·비주거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 및 불법건축물 대책, ③피해자로 일단 인정되면 추가요건 없이 원하는 금융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3. 전세사기 특별법의 올해 개정 시 필요사항과 이후 보완사항

① <올해 개정시> 선구제·후구상과 최우선변제금 현실화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강화

- 올해 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시, 반드시 피해자에 예상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구제·후구상(회수)' 제도 마련이 필수적임
 - * 11월28일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 지원조례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국민의당 전원반대로 부결, 조례가 아닌 특별법으로 추진하여 피해자 지원해야 함
- 주택의 공공재·필수재 측면을 강조하여, 보증금 전체 잃은 피해자에 일부라도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국가보상' 현실화도 절실함
 - * 일례로 서울거주 시 1.65억원 이하 전세(서울시 세입자 1/4에 해당)의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금 0.55억원 지급하여, 서울시 세입자 3/4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변제금도 너무 낮은 측면이 있음

② <차후 개정전> 전세사기 처벌강화 및 사기공모일당 단속 확대, 가해방지 확대

- 전세사기범 형량 강화 및 악성임대인 명단·신상의 확대공개·신속추진
 - * 전세사기는 여러 생명을 앗아갔지만 악질적인 전세사기범 2명 중 1명은 실형을 면하는 수준으로 양형기준이 너무 낮고, 380여 명의 상습적 악성임대인(HUG기준) 관련 전세보증금은 총 2조가 넘지만 명단공개는 5명뿐인 참담한 상황 (악성임대인 명단공개는 주택도시보증법 소급적용 불가)
 - * 악성임대인, 체불사업주, 상습체납자 등 사회적 분노가 제도적으로 해소된 신상공개 공표제도는 절차가 3년 이상이며 얼굴공개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전세사기의 경우 주택의 공공재·필수재 측면을 강조하여 보다 확대하여 공개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공모일당 단속 확대
 - * 최근 전세사기 브로커들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는 현재까지 진행된 피해자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향후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③ <장기 추진> 공인중개사 플랫폼, 임대인정보 확대제공, 토지주택은행 등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예방·예비를 위한 제도 구축

- 임차인 대부분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임차계약자가 안심할 수 있게 중개의 투명성을 높여 거래할 수 있는 진일보된 방식을 모색할 필요
 - * 중개사가 직접 등록하는 플랫폼 구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공인중개사 상위 관리단체 등
-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임대인 정보(세금체납·보증사고·임대주택 수 등)를 임차인에게 확대 제공,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또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중 아직 계도중인 '전월세신고제'를 시행,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임대차시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임차인 보호기능을 높여야 함
- 주택의 매입·비축·개발·공급에 공공측면에서 예비 기능이 높은 토지주택은행 설립
 - * 최근 '금융기관 선순위 부실채권 매입·에스크로' 및 'HUG반환보증 기준 강화·확정일자 실시간 확인' 등 다양한 금융부문 대안이 각각 제시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주택부문 대안으로 주택의 매입·비축·개발·공급까지 공공 입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토지주택은행' 설립도 깊이 고민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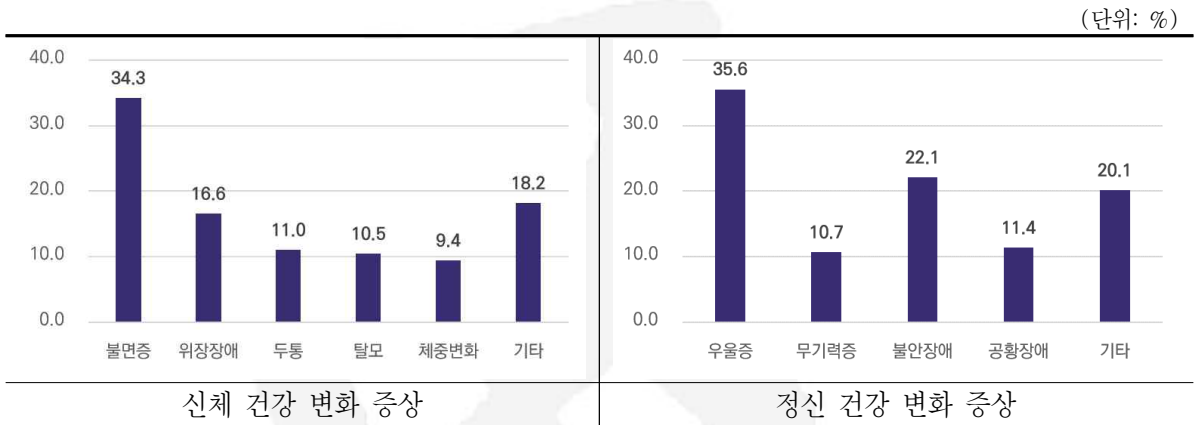
<참고1> 민주연구원,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등 보증금미반환위기가구 실태조사 발표2)

○ 주요 조사결과

1. 피해자 가구 삶의 질이 현격하게 하락

-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 및 삶의 만족도 전반에 대한 상황 악화는 공통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무기력증 순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되었고, 삶의 만족도는 90% 이상 저하
- 하지만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점이 어려웠는데, 피해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사회 시선과 부모님 및 지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음

[그림] 임대보증금 위기 발생 전후 건강 변화 증상



2. 은행,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기관의 문제점 노출

- 서울 강서구 임대보증금 위기 가구의 77%는 은행 대출을 이용해 임대보증금을 마련했지만 피해를 유도당한 경우가 있었고, 99%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해 주택을 임차했지만 임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
- 도덕적 해이 정황이 일부 확인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기가 어려움

3. 아직도 40%이상 피해자들이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

- 지난 10월 조사시점까지 서울 강서구 임대보증금 위기 가구 중 59%만 피해 신청을 한 상황으로,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피해자로 결정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실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①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의 이용이 어렵고, ②일부 민원은 현장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으며, ③은행 상담을 위한 방문 시 창구의 업무 미숙지에 따라 방문을 반복하는 일도 있었으며, ④대출 상담을 위한 장시간 현장대기 및 전화대기 등 여러 어려움이 확인
- 더욱이 정부의 정책 체계보다 피해자 단체 메신저방에 의지하며 대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 드러나고 있어, 당국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되는 상황

2) 민주연구원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2023년9-10월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해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 위원회 및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센터와 공동으로 중간결과발표(10월6일) 및 최종결과발표(11월30일)를 국회 소통관에서 2차례 진행하였음. 실태조사 최종결과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

<https://idp.theminjoo.kr/board/view/archive/2102>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관련 요청사항

1. 기존 시행 중인 전세사기피해 신청대상자에 한정된 현황 파악에서 탈피,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에 대한 확대 및 보다 세분화된 정책로드맵 마련
2. 소통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편 개선과 전달체계 개선
3.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과 사회편견 불식 홍보 필요

<참고2> 서울시 강서구,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³⁾

○ 주요 내용

1. 전국 자치구 최초 제정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

-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이며, 그중 355명이 응답해 64.5%의 응답
- 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등을 확인하는 일반사항과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소송수행 경비 현황 ▲법률상담 지원 개선방안 ▲심리상담 지원 개선방안 ▲피해자 단체(모임) 구성 ▲기타 건의사항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

2.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30대 피해자, 2억대 피해액수, 향후 우선매수권 행사’

-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음
- 또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하여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응답
-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음
-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큼
- 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
- 특히 피해자 대부분인 89%가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음

3) 서울시 강서구청은 특별법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 대상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피해현황-향후 주거계획-기존 정책 문제점-개선방안까지 포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를 12월5일 강서구청에서 보고회를 개최하여 발표(이후 12월15일 소송경비100만원 신속지원 결정). 발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
<https://www.gangseo.seoul.kr/gs040201/295318?srchCtgr=&srchStdg=&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3.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

-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참고3> 서울시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대책 토론회 개최⁴⁾

○ 주요 내용

1. 전세사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

- 현 전세사기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건으로 제도의 수정이 시급하며, 2023년 관악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이 시작

2. 정부차원의 피해조사는 법제정 과정에서 약속, 그러나 미이행 상황 지속

-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보증금 비반환 피해자의 규모, 유형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법상의 지원 정책 외에 어떤 정책 수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근거가 빈약

3. 아직도 피해지원의 실적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황

- 경·공매 유예에서도 정책의 문제가 발생하여, 우선매수권 부여·피해주택 공공매입·20년 분할상환·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등 주요정책도 시작부터 사각지대 발생

4. 현 지원책은 보증금 피해구제 방안이 없는 한계점이 명확, 특별법 개정 절실

-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원받을 수 없고 주택관리 빈약·소송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지원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추가 지원이 절실
- 이와 별개로 전세 제도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 및 교육이 필요

4)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강서구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은 상황(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11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구로구 순).

이에 서울시 관악구 국회의원 정태호 사무소는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관하여, 12월7일 관악구 대학동 참소중한 1층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음.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

<https://blog.naver.com/2000jth/223285845649>